

# 필요없다던 '다이빙벨' 뒤늦게 빌려와 투입하려다 들통

&lt;20시간 수중작업 가능 장비&gt;

## 수색·구조작업 곳곳 '엇박자'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뒷북 조치와 엇박자 구조작업을 바라보며, 국민들의 유통이 커지고 있다. '필요없다'던 구조장비를 뒤늦게 물에 들어오는가 하면, '방해된다'며 민간구조단을 내쫓은 사실이 드러나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간의 다이빙벨 사용을 거부했던 정부가 뒤늦게 한 대학에서 다이빙벨을 빌려와 사고현장에 투입하려던 것이 들통났다. '다이빙벨'은 잠수용 엘리베이터로 잠수부들이 다이빙벨 안에서 머물며 수중 깊은 곳에서 20시간 가량 작업이 가능한 장비다.

당초 정부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자 가족의 요청을 받은 해난구조 전문가 이종인 씨가 다이빙벨을 현장에 들고갔으나 사용을 거부했다. 이종인 씨는 "해경 측에서 다이빙벨이 안전에 문제가 있고 구조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투입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뒤인 23일 새벽 해경과 계약을 맺은 국제구난협회 소속 '언단이'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산업잠수관에서 다이빙벨을 빌려와 사고해역 인근에 대기시킨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조 당국의 '뒷북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민간구조단의 엇박자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실종자 구조작업을 하던 일부 민간잠수사들이 철수했다. 민간잠수사들이 일주일간의 구조작업 현장에서 해군과 해양경찰과의 마찰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사고 초기 300명을 넘었던 민간 잠수사는 24일 오전 현재 20~30명(기판·팽목함) 남은 상태다. 잠수기회를 얻기 기대만큼 많지 않아서다.

## "수색 방해" 참여 제한에

### 민간 잠수사 대부분 철수

### 수색장비 사용도 오락가락



공기공급호스를 입에 문 민간잠수사(머구리)가 24일 오전 진도군 병풍도 세월호 침몰 해상을 수색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고 있다. 머구리 잠수사들은 긴 공기호스를 착용해 깊은 곳까지 들어가 수색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 민간 잠수사는 "제대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수색에서 제외될 때가 있어 답답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에는 또 다른 민간 잠수수는 "해경 관계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정부사고대책본부는 이에 대해 "군·경의 수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자원봉사 잠수부의 참여를 제한했다"며 "미리 설명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욕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간 잠수사가 아니라 부하 직원에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사실상 민간 잠수부의 참여가 수색에 도움보다 방해가 됐다고 발표해 또 다른 갈등의 소지를 낳기고 있다.

각종 수색 장비 사용 여부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최근 들어 구조팀은 수색방식을 선박에 산소 공급 장치를 두고 에어호스를 이용하는 일명 머구리 잠수사 위주로 전환했다. 머구리는 수심 30~40m 아래로 1시간 가량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다.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협조 시스템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 靑 "개각 안하는게 더 이상"… 시기·폭 관심

### 개각 불가피론 급부상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정부의 부실한 위기관리를 계기로 개각 불가피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미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여당 내부에서도 개각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점차 공론화될 조짐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4일 "이 정도의 큰 참사가 벌어졌는데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이상하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대응은 매우 한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앞서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드시 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안행부·해수부·교육부

### 칼날 파하기 어려울 듯

### 야권선 "내각 총사퇴를"

우선 이번 사고 발생과 수습 과정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교육부장관은 개각 대상에 빠지기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과 관객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들 장관은 해당 부처가 사고 발생 초기 구조작업과 이후 사고수습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거나 장관 당사자를 일부가 논란이 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기도 해 개각의 칼날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일각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까지를 포함한 대폭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 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선언하고

박 대통령에게 재신임을 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 특유의 인사 스타일 상 장관들을 모조리 교체하는 전면 개각카드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청와대 한 인사는 "소폭 개각으로는 민심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겠지만 전면 개각을 할 경우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정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선별적으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시기는 6·4 지방선거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방선거 전에 개각을 단행해 개혁과 혁신의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의 의당 공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아 개각 시기가 방선거 이후로 잡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靑이 재난컨트롤타워 맡아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청와대가 국가 재난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전날 저녁 이경욱 안전행정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전 부처의 재난 매뉴얼 점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설했다.

하지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국내의 안보 사안은 물론 각종 재난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과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재난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